데스크 시각

야권의 총선 승리 방정식

임 동 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야권 진영이 총결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분당의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기어이 탈당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은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길을 개척하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두 사람의 선택은 경제학 게임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력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개인의 욕심이 앞서면 서로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인 두 명의 죄수와 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분리된 취조 환경이 설정된다. 조건은 두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버틸 경우 자백한 사람은 석방되고 버틴 사람은 10년 형을 받게 된다. 두 죄수 모두 자백하지 않는다면 함께 1년 형을,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함께 5년 형을 받는다.

이러한 실험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 석방의 유혹과 10년 형이라는 '독박'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자백함으로써 1년이라는 가벼운 형 대신 결국 5년 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죄수의 딜레마와 불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선택도 죄수의 딜레마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야권의 대선주자이자 당내의 주류와 비주류를 대표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언함으로써 소통과 신뢰를 통한 통합과 혁신, 이를 기반으로 한 총선 승리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강화라는 최선의 선택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의 분열 구도는 야권의 필패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도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어 야권은 '죄수의 딜레마' 구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권 분열 정국의 해법은 없을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수학자 존 내쉬(John Forbes Nash Jr)의 '균형 이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쉬의 균형 이론은 경쟁 주체가 상대의 입장과 전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느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체적인 이득의 목적과 부합되는 방향을 지닌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 개인과 전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조건이 전제된다.

호남 민심에 보답해야

죄수의 딜레마의 근본적 원인은 '불신'인 반면 내쉬의 균형 이론의 정점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쉬의 균형 이론은 야권에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혼돈의 야권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야권의 리더들이 희생과 헌신의 선택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통합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 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년 총선 직전 야권 통합 혹은 총선에서의 적극적인 연대 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야권은 내년 총선에서 제로 섬(Zero-sum) 경쟁이 아닌 상생의 시너지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양보와 배려의 정서를 가진 집단이 개인적 이익이 우선되는 집단보다 혹독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진화의 확률이 높다는 생태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야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존 내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조현병에 시달렸던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라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호남 민심은 그동안 '정치적 섬'으로 전락하면서도 좀 더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며 야권에 헌신적 지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호남 민심에 보답하기 위해 야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총선 승리의 방정식을 풀어냄으로써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은펜칼럼

네팔과 산둥수용소

박 행 순
전남대 명예교수·카트만두대 객원교수

오늘의 네팔 현실이 2차 대전 중에 중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2000여명이 감금생활을 한 산둥 수용소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다.

'산둥수용소'(1966년)의 저자 랭던 길키(Langdon Gilkey)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0년부터 북경의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43년 3월부터 2년반을 수용소 생활을 했다. 그의 체험과 사색을 담은 이 책은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둥수용소는 담장 안에서만 살아야하는 감금생활,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잔혹한 전쟁포로수용소와는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었다. 매일 두 번씩 점호는 있으나 신체적 속박은 없었고 자치가 허용되었으며 배급되는 식재료로 자체적으로 공동 취사를 하였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를 국경으로 하는 내륙국가로서 자체 산업이 극히 미약한, 아시아 최빈국에 속한다. 중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는 길이 협소하고 너무 멀고 험해서 거의 모든 물품들은 인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4개월 이상 휘발유, 가스를 비롯한 생필품들의 유입이 봉쇄되고 있다. 네팔의 식자들은 이를 '경제전쟁'(economic war)이라고 부른다.

네팔은 2007년, 왕정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후 새 정치 체재에 맞는 헌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러나 100개가 넘는 종족어를 가진 다종족 국가안에 4개의 주요 정당과 30개 이상의 군소정당 간에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봄, 대지진이 가져온 지각 변동 후 정치 지각 역시 대격변을 거쳐 주요 3당 합의하에 9월20일 신헌법이 통과되었다. 힌두국가에서 세속국가로의 전환,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후 여성대통령 탄생도 신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팔은 아직도 진도 5 이상의 꽤 큰 여진으로 불안한 것처럼 공화국 헌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당간 각축 상태이며 직간접으로 인도와의 관계가 긴장상태이다. 국경봉쇄가 언제 풀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산둥수용소에서는 총칼을 든 일본군에 의해서 감금상태의 외국인들이 바깥 출입을 못하였지만 지금 네팔에서는 차량 연료 부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억제되고 있다.

산둥수용소에서 암거래가 성행했듯이 지금 네팔도 그렇다. 돈만 있으면 그런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ℓ당 1000원도 못하던 휘발유가 4~5000원에 거래되고 주식인 쌀과 녹두, 식용유 등 물건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난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산둥수용소에서 부족한 배급으로 살아가는 수용자들은 춥고 배가 고팠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자국 귀환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미국 적십자사가 보내주는 풍성한 구호물품들이 있었다.

2015년 4월과 5월에 네팔이 두 차례 대지진을 겪을 때, 세계가 네팔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지금 네팔은 지진 때보다 훨씬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외부의 도움과 언론의 관심이 절실하지만 세계가 무심한듯하여 야속한 느낌마저 든다.

수용소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그 안에서 도덕과 질서, 평등과 평화, 협업, 기술을 통한 봉사 등 나름의 수용소문화가 형성되고 독특한 생존방식이 생겨났다. 마약 중독자가 갱생하고 비만에서 탈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네팔에 취사용 프로판 가스가 떨어지자 자연스레 화덕을 사용하고 장작을 때서 밥을 한다. 차량운행을 자제하니 카트만두의 공기 오염도가 감소하는 좋은 면도 있다.

의식 있는 네팔인들은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로부터 자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자국 헌법에 대한 외부 간섭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존심은 네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7~80년 만에 찾아온다는 대지진으로 간담을 서늘케 했던 2015년, 고향 방문길을 막고 문명의 시계 바늘을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던 힘든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새해에는 이 나라에 안정과 평화가 풍요 속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재앙 아닌 축복의 노년 되려면

이 승 현
KDB생명 광주지역본부장

'살아서 일에 치이고, 죽기 전 여생을 즐길 시간도 가장 짧고, 소득수준은 최하 수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노인이 처한 슬픈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런 이유로 한국인은 또 OECD 4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남성 은퇴연령은 72.9세, 여성은 70.6세로 여성이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법정은퇴시기(60세)를 지나고 나서도 남녀 모두 10년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은퇴한 뒤 여생을 마칠때까지 쉬는 기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짧았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연금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고민과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의 생애재무설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고 각각의 생애시기에 맞는 자산축적, 질병, 사망, 노후, 상속 등 설계와 준비를 해야만 고령화 사회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 소득과 일자리, 질병 등을 난제들로 꼽을 수 있는데 최근에 장기간병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른바 '간병 살인'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죽이는 비극이 현실화되면서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생명보험사 은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3384만명 중 장기요양 상태에 빠진 고령자만 600만명에 이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 입주가 늘었지만 집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 그러다보니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 간병인이 700만명 이나 된다. 고령화 비율이 낮았던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병 퇴직'은 느는데 간병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다 같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가뜩이나 소득이 없어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한국의 노령층들이 장기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가족 및 국가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노인의 삶의 질은 최악으로 빠지게 된다. 하루빨리 개인 및 가족들이 장기간병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이유다.

최근 장기간병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기간병보험을 준비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인의 삶을 바꾼 히트상품으로 셀카봉, 배달앱, 쿡방, 삼성페이, 카카오톡 등이 선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장기간병보험이 첫 번째 히트상품이 되길 기대해 본다.

社 說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학부모 피해 없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져 보육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그제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598억 원을 전액 삭감,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촉구하는 압박 차원에서라고는 하지만 학부모들은 혹여 아이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많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비인 482억83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 국가가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이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22만 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7만 원 등 29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공립은 유아 학비 6만 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5만 원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파장의 근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샅바싸움 때문이다. 지자체는 무상보육의 핵심인 누리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했지만 결국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며 지자체가 반발해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단 정부 압박용 동력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밖으로 새나오는 예산 갈등 마찰음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의회가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왕에 편성된 예산까지 삭감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분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심불량 '표지갈이' 교수 명단 공개해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속칭 '표지갈이' 대학교수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33명의 교수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의정부 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다른 교수가 쓴 대학 전공서적을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펴낸 혐의로 적발된 전국 대학교수는 모두 182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 대학교수는 원저자 7명, 허위저자 26명 등 총 33명이 포함됐다.

이들 교수는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원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한두 글자를 추가해 책 제목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저자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책 디자인만 바꿔 여러 차례 발행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이 공동저서보다 단독 저서에 더 높은 실적 점수를 부여한 점을 노려 출판사에 먼저 표지갈이를 제안한 교수도 있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표지갈이가 최근 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그냥 눈감아 주고 쉬쉬해 왔다. 그 결과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현직 교수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이처럼 표지갈이의 늪에 빠진 것은 호봉 승급과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1차적 책임은 연구자 자신이지만 대학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낸 연구업적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시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대학은 교수들의 논문과 책 출판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엄정히 하고 교수사회도 자정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도뢰(圖賴)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른바 '고의 사고'라는 건데, 자동차 보험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다.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 공갈'도 그 중 하나다. 자료를 뒤져 보면 '자해 공갈'의 역사가 무척이나 깊고 형태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해 공갈'의 극단적인 형태로 자신이나 가족의 시체를 공갈·협박에 이용하는 '도뢰'(圖賴)라는 게 있다. 한때 크게 유행했다는데, 19세기 중반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린 심연경이 쓴 판결집을 보면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공갈에 이용한 사례가 나와 있다.

"주작통이라는 사람은 숙부인 주성화의 전답을 경작했다. 어느 날 주성화는 주작통이 경작하고 있는 전답을 거둬들인 뒤 똑같은 면적의 다른 전답을 내주었다. 한데 이 전답은 훨씬 좋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소작료는 이전의 땅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화를 풀 길 없던 주작통은 주성화의 집 문 앞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자살한 주작통을 발견한 주성화는 급히 시체를 집안에 숨겼다. 하지만 주작통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친척을 시켜 시체를 다시 주성화의 집 대문 앞에 두게 했다."

이 사건은 결국 주작통이 아내로 하여금 주성화를 협박하는 데 자신의 시체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도뢰'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는 누군가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을 큰 죄로 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심연경은 '매장은(埋葬銀-시신 매장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은 10냥을 죽은 이의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결국 주작통은 자신의 시체로 숙부를 협박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해쳐 가며 다른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은 뒤 이득을 챙기는 '자해 공갈'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지역민을 볼모로 삼아 분열을 일삼는 것을 보면 '일종의 도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짓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당 찍게 될 것 아닌가"라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해 공갈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